즉시 배포용: 2021년 10월 2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임시 해고 위험에 직염한 직원이 고용주에게 업무 공유 프로그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

법안(S.17-A/A.7373-A)은 고용주에게 업무 공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여 인력 감축을 막거나 재고용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을 직원에게 부여.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잠재적 해고 위험에 놓인 직원이 고용주에게 업무 공유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노동법 개정에 따라, 직원의 대부분은 해고 전 또는 해고 10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업무 공유 프로그램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일주일 내에 답변을 보내야 하지만, 프로그램을 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업이 정상으로 회복했을 때, 해고 노동자의 일부가 아니라 모두가 재고용 기회를 갖는 것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가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려면, 우리는 노동자 지원에 집중하여 회복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뉴욕에서 업무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는 기업에게 뉴욕 주민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업무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는 근무 시간을 줄이는 대신 직원을 모두 고용하여 해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근무 시간이 줄어든 노동자들이 임금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실업 보험을 제공합니다. 미 노동부(United State Department of Labor)는 경제 재개를 지원하고 더욱 많은 노동자가 재고용될 수 있도록 업무 공유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고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실업 보험 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기업이 숙련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원활한 운영을 돕습니다.

Shelley B. May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NYS Department of Labor)의 업무 공유(Shared Work) 프로그램은 해고를 막고, 신입 직원 훈련 비용을 절감하며, 직원들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실업 보험 혜택을 일부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기업 및 직원들이 경제 불황을 견딜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이번 법안은 직원들이 고용주에게 보복의 두려움없이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잘 이용되지

않았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독려합니다. 뉴욕 주민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